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5752 보증채무금
원고, 항소인	A건설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빌딩)
	대표자 이사장 D의 직무대행자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형근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10256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2. 23.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5,998,597원 및 그 중 5,539,068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2016. 9. 8.까

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459,529원에 대하여는 2015. 9. 23.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673,315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나주시 남평읍 일원의 남평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F토건 주식회사(이하 'F토건'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제조합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F토건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원고는 F토건에 ① 2005. 7. 20. 이 사건 공사 중 남평대교와 건덕터널 사이의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59,000,000원(수차례 변경을 거쳐 최종 공사대금은 2,144,634,000원으로 되었다)으로 정하여, ② 2008. 8. 14. 터널갱구부 토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479,404,000원(그 후 2,678,055,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③ 2008. 8. 14. 배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19,384,000원(그 후 2,485,076,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④ 2008. 8. 14. 터널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39,787,000원(그 후 1,309,838,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⑤ 2009. 3. 20. 건덕터널종점~공사종점구간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25,944,000원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선급금보증

1) 원고는 F토건에 위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각 선급금 합계 1,555,141,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선급금과 관련하여, 각 보증기간 내에 F토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미지급 기성금에 충당되고 남은 미정산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F토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의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청구

1) F토건이 위 각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0. 1. 25.경 위 ④ 공사를 제외한 나머

제1조(보증책임) ① 전문건설공제조합(피고)은 계약자(채무자)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② 보증별 보증사고의 내용과 보증금 지급 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보증사고	보증금 지급 한도
선급금보증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미정산 선급금의 반환채무불이행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미정산 선급금 중 미지급기성금을 차감한 금액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피고에게 알리고, 보증금 청구 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4.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 피고가 청구하는 서류

②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고는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된 필요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피고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증금의 지급) ① 피고는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고는 보증채권자의 청구 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 각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금 및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2. 5. F토건에 보증금 지급예고를 통지하면서, 원고에게 보증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F토건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11.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10. 4. 30.경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조속히 계약이행 보증금 및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와 F토건 사이의 소송

1) F토건은 위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2010. 2. 11. 위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427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④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7,956,000원 등 908,239,900원의 공사대금에서 미정산 선급금 645,064,000원을 공제한 214,529,18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는 같은 법원 2014가합5269호로 미정산 선급금에서 위 ④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7,956,000원을 공제한 627,10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원고와 F토건 사이의 이 소송을 'F토건 소송'이라 한다).

2) F토건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1. 12. 16. F토건의 본소 청구 중 155,887,00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 9. F토건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F토건은 원고에게 431,58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2나142(본소), 2012나159(반소)]. 그 후 2015. 6. 11.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431,589,091원은 F토건이 원고에게 반환할 미정산 선급금 645,064,000원에서 원고가 F토건에 지급할 추가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213,474,909원을 공제한 돈이다.

바. 피고의 보증금 지급

F토건이 위 판결 확정 후에도 그에 따른 미정산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위 판결금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3,909,091원 등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돈을 공제한 38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정산 선급금의 원금인 위 388,800,000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F토건 소송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0. 1. 26.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388,800,000원에 대한 2010. 1. 26.부터 2015. 1. 9.까지 1,809일간의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96,347,836원, 2015. 1. 10.부터 2015. 9. 22.까지 255일간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54,325,479원으로 그 지연손해금 합계는 150,673,315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388,800,000원을 위 지연손해금에 먼저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선급금 보증금의 원금 중 236,749,498원(388,800,000원 - 150,673,315원)만을 지급한 셈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잔액 150,673,315원 및 그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9. 23. 이후의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F토건 사이의 위 하도급공사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F토건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나아가 원고가 2010. 1. 25.경 피고에 대하여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4. 30. 보증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조속한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결정된 보증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액 결정 및 보증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한 2010. 4. 30.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보증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보증사고와 관련한 조사기간, 보증금액 결정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보증금 지급을 청구받고 보완서류를 제출받은 후 선급금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1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2010. 4. 30.부터 1개월이 지난 2010. 6. 1.부터 이 사건 선급금 보증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1.부터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미정산 선급금 보증금 388,800,000원을 지급한 2015. 9. 22.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원금 388,800,000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5. 1.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5. 1. 10.부터 2015.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388,800,000원에 대한 2010. 6. 1.부터 2015. 1. 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89,637,041원 $[388,800,000\text{원} \times 0.05 \times (4\text{년} + 223\text{일} \div 365\text{일})]$, 2015. 1. 10.부터 2015. 9. 22.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6,361,556원 $(388,800,000\text{원} \times 0.06 \times 256\text{일} \div 365\text{일})$ 이며, 그 지연손해금 합계는 105,998,597원 $(89,637,041\text{원} + 16,361,556\text{원})$ 이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388,800,000원을 위 지연손해금에 먼저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보증금의 원금 중 282,801,403원 $(388,800,000\text{원} - 105,998,597\text{원})$ 만을 지급한 셈이 된다.

5)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원금 잔액 105,998,597원 $(388,800,000\text{원} - 282,801,403\text{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인 5,539,068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00,459,529원 $(105,998,597\text{원} - 5,539,068\text{원})$ 에 대하여는 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지연손해금 계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토건 소송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대로 2015. 1. 10.부터 2015. 9. 22.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급금 보증채무는 F토건의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되거나 선고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 76567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지연손해금율은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에게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킴으로써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판결에 따른 금전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당사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F토건 소송에서 주채무자인 F토건에 대하여 인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이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F토건 사이에 F토건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보증금 청구를 유보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도 위 합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원고와 F토건 및 피고의 3자 사이에 피고의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F토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F토건 사이의 위 합의는 원고가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3자인 피고가 위 합의에 동의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도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F토건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의 위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0. 4. 3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가 요청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니 조속히 계약이행 보증금 및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2010. 5. 25.경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 청구 건은 원고와 F토건이 계약해지의 정당성 및 공사대금 지급액 등에 대하여 쟁송 중이므로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0. 8. 20. F토건과 사이에 F토건 소송 및 선급금 보증금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F토건은 남평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 토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현재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에 소송 중인 공사 대금(본소) 및 선급금 반환(반소) 청구 소송은 소송결과에 따른다.
2. F토건은 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위 5건 하도급 잔여공사 전부를 포기하고 원고 회사에서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일체의 공사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원고 회사에서 피고 공제조합 광주지점에 요청한 F토건 관련 선급금 보증금 청구는 기 완료된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은 소멸하고 잔여부분의 보증에 대해서는 위 재판 결과 시까지 잠정 유보하며, 피고 공제조합에 청구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취소하기로 하고, 추후 위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4. 위 합의사항을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 10억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생략

3) 원고는 2010. 8. 26.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의 청구를 취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F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를 전해들은 후 2010. 5. 25.경부터 지급을 유보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보증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다.

4) F토건 소송이 2015. 6. 1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종료되고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15. 6. 18.경 피고에 대하여 F토건 소송의 확정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431,589,091원 및 이에 대한

여 2010. 1. 26.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5) 피고는 2015. 9. 22.경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금에서 합의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등을 공제한 388,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보증금 청구권을 종결하였다고 통지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15. 10. 8.경 피고에 대하여 위 388,800,000원으로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충당하고 남은 선급금 원금 150,126,685원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판단

1) 3자간 합의의 성립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4. 30.경 원고로부터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받고 2010. 5. 25.경 원고에 대하여 선급금 보증금은 F토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지한 후, 원고와 F토건 사이에 선급금 등의 반환은 F토건 소송의 결과에 따르고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청구는 F토건 소송의 종료시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하는 그와 비슷한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0. 8. 26.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의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통지하고 피고도 그 무렵 F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를 전해들은 후 2010. 5. 25.경부터 지급을 유보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보증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피고와 F토건 3자 사이에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불면제

다만, ① 이 사건 약관에 피고의 선급금 보증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미정산 선급금 중 미지급 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서(제1조 제2항), 공사대금 기성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는 자신이 심사한 기성금을 차감한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공사대금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의무 이행이 유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행보증계약에 관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참조), ②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 25.경 피고에 대하여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4. 30. 보증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조속한 선급금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지급 서류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5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10. 4. 30.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피고는 보증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져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2010. 5. 25.경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 청구 건은 F토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통지를 통하여 F토건 소송 판결에서 선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보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피고의 위 5. 25.자 통지 후인 2010. 8. 20. 원고와 F토건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위 5. 25.자 통지와 비슷한 내용(다만 그 합의 당사자가 원고와 F토건이어서 원고의 F토건에 대한 선급금반환 청구는 소송결과에 따른다고 표현되어 있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위 5. 25.자 통지의 경위와 그로 인하여 추인되는 피고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제3항의 “선급금 보증금 청구는 기 완료된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은 소멸하고 잔여부분의 보증에 대해서는 위 재판 결과 시까지 잠정 유보하며”의 의미는, 선급금 중 기성금에 충당한 부분에 관한 보증책임은 소멸하고, 기성금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보증금의 현실 수령 내지 그에 관한 법적 조치를 F토건 소송의 종결 시까지 ‘잠정 유보’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주채무

인 미정산 선급금 채무의 그 기간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거나 주채무와는 별개로 보증채무 자체의 그 기간 지체책임을 종국적으로 면책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⑥ 그리하여 F토건도 F토건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정산 선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용되었고, 원고도 F토건 소송 종결 후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피고와 F토건 3자 사이에 순차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토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이 사건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손병원

 판사 정성욱